

“10개 대기업 도시·10개 서울대로 균형발전 이뤄야”

전남일보-KLJC 민주 대선 예비후보 공동인터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한 김 지사는 16일 전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 왔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 일답.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 왔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책임자라는 생각이다. 두 번째로 시대정신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 통합의 과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하나 더 꼽는다면 글로벌 문제다. 지금의 국제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처가 필요한데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미시간주에 가서 관세와 관련된 대응과 우리 기업을 위한 행보를 하고 왔다. 30년 넘게 살아온 글로벌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 측면에서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는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 지금의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경제 운영의 틀 그리고 경제 위기·사회 갈등의 극복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7공화국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서민들에 대한 복지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책은 과거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

“경제 전문가… 민생 문제 해결”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추진
“7공화국 통해 사회 갈등 극복”

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는 개념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투자이고 그것이 곧 사회적 투자이며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대규모 추경이다.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추경 의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을 완전히 역주행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긴축 재정을 했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지 않았으며, 미래 먹거리에 대해 투자하지 않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어려운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민생 회복 지원금도 25만원씩 모두 알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고 촘촘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저는 그동안 지역 균형 빅딜을 통해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을 주장했다. 일본에 도요다시가 있다. 도요다의 본사, 공장과 연구소가 함께 이전해 도시 이름을 아에 도요다시로 바꿨는데 일본에

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다. 저는 대한민국의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조세도 그렇고 함께 이전하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혜택을, 또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또 하나는 10개의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서울대에 연 45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어 재정 지원을 통해 10개 대도시 기업에 맞는 특화교육을 시키고, 각각의 특화된 대학병원을 만들어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 저의 지역 균형 빅딜이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바로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세종시에 국무회의실이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있다. 대통령실 이전에 이어 국회까지도 세종시로 옮기는 실질적인 수도 이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민주당 경선에서의 전략은.

-제가 민주당 경선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본선이다. 경제를 잘할 수 있다. 글로벌 문제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적임자다.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제가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 정당당당하게 이기겠다. ‘어대명’이 아니고 ‘어대국’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최선을 다해 국민과 당원들께 호소하고 좋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빅텐트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치 경력이 짧다. 처음 정치할 때부터 구태정치는 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선 룰을 발표했지만 당당하게 경쟁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도 바꾸고 싶다. 네거티브와 메르드 선대위 구성, 대규모 조직 동원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대신에 다른 세 가지를 하겠다. 첫 번째는 비전과 정책이다. 두 번째는 단기 필마 정신으로 후보가 중심이 돼 선거를 치르겠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들과 함께 캠프를 운영해 새로운 선거 문화와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겠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남도 “美 관세,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 모색”

박창환 부지사, 주미대사와 대응 논의
지미 리 전 장관 국제교류자문관 위촉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현동 주

미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전남 수출품 대응과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한 각 나라의 대응 및 미국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전남의 철강, 석유화학, 농수축산물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직면할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남도는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 전남의 전략 수출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은 우선 조정이 되도록 하고, 농수산물은 관세 부과

가 유예되도록 힘써 주라고 요청했다.

이어 15일 박창환 부지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행정부 장관과 버지니아주 상무차관을 역임한 지미 리(Jimmy Rhee)에게 전남도 국제교류자문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남도의 국제 경제력 확대 및 국제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지미 리 전 장관은 메릴랜드주 장관 재

임 중, 미국 내 6000여 소수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 및 조달시장 연계에 힘썼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정책 역량을 겸비해, 전남도의 해외 협력 기반 강화와 수출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현 기자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2025. 4. 14. ~ 6. 1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